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40호
2022. 1. 17

특집

정부부처별 건설 관련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분석
(건설, SOC, 주택 부문)

-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지속 추진 강조, 규제는 연속 강화
- 'SOC', 투자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 노력 경주
- '주택'... 수요보다 공급,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건설논단

- 건설기업은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없는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지속 추진 강조, 규제는 연속 강화

- 여전히 산업 보호·육성과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인색한 상황 -

정부 각 부처, 잇달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된 지 보름가량 지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잇달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다만, 올해는 現 정부(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가 구성되는 해이기에 예년과 달리 적극적 정책 입안 및 추진계획 발표보다는 국정(國政) 추진을 마무리하는 수순의 연계 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 대부분 기존 여러 차례 개별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을 예정하였던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일례로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예년과는 달리 직전년도 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 현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추진 성과와 평가를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 정부 정책 추진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 분석,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 담겨

- 직접적으로 건설산업과 관련한 유관 정부 부처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드러남.¹⁾
 - 즉, 건설 관련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평하자면, 예년과 달리 새로운 정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을 담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경제활력 제고, ② 포용적 민생 회복,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의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건설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표 1>과 같이 3가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의 건설 관련 올해 정책 추진계획을 요약하면, 크게 ① 건설생산체계 개편 계속 추진과 ② 스마트 기술 도입 확대 및 관련 기술개발 가속화, ③ 해외 수주 확대 지원, ④ 건설기능인 보호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⑤ 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기준 정비 및 관리 강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연속적 추진과 더불어 최근 탄소중립이 다시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⑥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확대와 더불어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강화 정책 추진을 발표함.

1) 본 고에서 분석한 건설산업 관련 올해 정부 부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범위는 건설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투자, 부동산, 기타 고용, 인력양성, 조세 등의 내용은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산업과 연관된 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표 1> 건설산업 관련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 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심제의 기술변별력 제고 및 공정성 강화 추진 - 업종 개편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 BIM 등 스마트기술 의무화 - 스마트건설 지원 2센터 건립 등 스타트업 지원 • 해외 수주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수주 집중 지원 - ODA 중장기 로드맵(2021~2025) 본격 추진 등 G2G 협력 강화 -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기업 타당성 지원 규모 확대(2019년 70억원 → 2022년 130억원) - 통합투자플랫폼, 민관합동TF 등 'Team Korea'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 대상 확대 (20년 공공 1천㎡ ↑ → '23년 공공 500㎡ ↑ → '25년 민간 1천㎡ ↑ → '30년 민간 500㎡ ↑) - ZEB 인증 인센티브 강화(용적률 완화 확대, 최대 15% → 20% 등) - 민간 신축건축물 ZEB 의무화 대비 건축에너지 인증제도 통합, 핵심 기술개발 R&D 추진 등 활성화 기반 조성 - 기축건물 대상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 마련 및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금 등 지원방식 다각화 • 건설 일자리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 강화 및 적정임금제 기준 마련, 갈등해소센터의 갈등 해결 강화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 건설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등록말소 강화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및 허가 대상 확대 등 건설안전 3법 정비 • 현장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목적 점검 대상·인력 확충 (현장점검 대상 : '21년 19,600개소 → '22년 22,600개소, 점검인력 '21년 199명 → '22년 308명) - 현장 고강도 불시점검 강화(지방청 점검대상 약 40%까지 확대) -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체계 마련 및 스마트 안전장비와 공장 사전제작(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 안전 컨설팅 확대 • 건설 현장 기자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수입자 인증, 장비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결함장비 관리 강화 -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 도입 • 기반시설물 안전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터널 등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개량 투자방안 모색(예 :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 교량 등 기반시설물 대상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적용 확대

자료 : 국토교통부(2021),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 개선과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터 구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경우 2021년에 이어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외 최근 건설현장 내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간의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기지연 등의 피해 발생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기존 추진 정책(국무조정실 주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국토부의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설치) 외 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 운영 추진계획을 발표함.

<표 2> 건설산업 관련 고용노동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 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갈등 빈발 분야인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내 정례협의체 신설·운영을 통한 갈등관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질 없는 안착 유도를 위한 집중점검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고 다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본사·전국현장 감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관리 강화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예방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의 경우 2021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자 소관 현장 중심 불시감독 추진 - 50억원 미만 중소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패트론펙트럼과 감독 연계 강화 -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의 경우 사망사고 다발 공종(지붕공사 등), 기인물(달비계 등) 등을 고려하여 무료 기술지도 및 취약 시기 집중 홍보 추진

자료 : 고용노동부(2021),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표 3>과 같이 기존 정책의 현장 안착 유도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에 치중한 올해 업무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작년부터 추진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와 신규제도 도입 계획 또한 함께 발표함.
 - 특히 기존 서울, 충남 등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별도 지자체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던 지역 외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건설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예방·관리 강화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표 3> 건설산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 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이 되는 소비자	
경쟁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계약 관련 진입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에서 과도하게 높은 이행실적을 요구하는 규정 등의 발굴 및 완화 추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하도급 표준계약서 제·개정 방식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사업자단체 대상 간담회 등 홍보 추진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적 법 준수 기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

<표 3> 건설산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속)

분 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거래조건 개선 및 협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거래조건 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개정)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분야 맞춤형 감시를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분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인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 제공 시 사용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수급사업자(하도급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현장에서 갑을문제 대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을 분쟁 대응과 관련한 지자체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지역 현장에서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위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 검토 공정위와 지자체 간 법 집행 협업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시장에 대한 점검과 사건처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불공정행위 대응 및 피해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심의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① 업무개선 분과, ② 조직개편 분과, ③ 업무조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추진 소액과징금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확대를 통해 심의 신속화 및 핵심사건 대응 역량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체적분쟁해결(ADR)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설치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급법」 개정)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도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을 지속(「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도급법」 개정) 갑을관계 전 분야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하위규정 정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2),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경우 SOC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 사항 외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²⁾을 살펴보면, ESG 도입에 따른 공공조달 정책 변화 추진 외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³⁾에 따른 ① 혁신·신산업 지원(11개 과제), ② 공정계약문화 정착(19개 과제), ③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15개 과제)의 계속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이 지속하여 추진될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계약제도 변화 방향의 경우 올해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산업 정책·혁신지원 등 주요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변화 유도

2) 기획재정부(2021),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안전부(2021),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조.

3) 관계부처 합동(2020),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혁신성장전략회의 20-4

등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의 전략적 활용은 올해 조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음. <표 4>와 같이 조달청의 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와 탄소중립, 혁신조달 등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주된 업무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표 4> 건설산업 관련 조달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 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경제활력 회복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계약의 63%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조달계약 전망 54.4조원 중 63%인 34.2조원 상반기 집행 • 상반기 조달계약의 63%까지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소요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 최대 10% 인하(1분기 10%, 2분기 5% 인하 추진) - 입찰참가예정자가 공공조달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조달계획 조기 공표(2~3월 → 1~2월)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급지급 확대(70% → 80%) 등 코로나19 계약특례 적극 활용 지속 추진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공기보장, 안전설계 등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 대상 공사기간 산정 서비스 제공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안전관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 건설현장 안전 문화 정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전문가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기획·설계·시공全过程를 연계한 전문적 안전관리 시범 시행 - 근로자 등 건설 현장 참여자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신문고(App) 운영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 관련 혁신제품(지하구조물 안전 사다리, 추락 보호 에어백 등) 활용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평가(공공조달 ESG)를 반영한 공공조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가점 위주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협상계약, 기술형입찰 등) 시범 적용 검토 •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른 가점(0.6~1.0점) 부여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 •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목적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자료 : 조달청(2022), 2022년 조달청 업무계획.

-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본 건설산업 유관 정부 부처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표 5>와 같이 올해부터 신설·변경되는 건설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함께 경주될 것으로 전망됨.

<표 5> 2022년 신설·변경되는 건설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2022년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외)

부처명	주요 제도명	주요 내용
기재부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승인 유효기간 2년, 시범 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 반영)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 강화(중심제 및 PQ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 대폭 강화)
공정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가능(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의무 부과 가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자료 : 기획재정부(2021), 202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과제가 대부분... 건설업 경쟁력 강화 유도하는 보호·육성 정책 필요

- 상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설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에는 불공정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한 계속된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과제가 주로 담겨 있고, 건설산업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정책이 미흡함.
 - 참고로 건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정책과제로는 조달청이 기존 서울특별시만 운영하던 공공공사의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작년 이어 계속하여 추진한다는 점임.
- 반면, 타 산업의 경우 코로나19와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산업 위축을 우려해 여러 지원 정책(재정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폭넓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한 상황임.
 -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안전과 관련하여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은 이와는 달리 규제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 정책 중심임.
 - 또한, 산자부는 작년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후속 조치로 올해 지역 내 주요 산업 위축 시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등의 전방위적 수단을 활용한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건설산업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됨.
- 올해 2분기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국정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될 것임. 새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정책이 대폭 마련되기를 기대함.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SOC’, 투자 조기 집행으로 경기회복 노력 경주

- 초광역권 조성·연결 등 지역균형발전 및 노후시설물,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

국토교통부 :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 및 연결, 한국판 뉴딜 고도화, 안전

● 초광역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대도시 거점) 문화·산업·주거 복합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마련 및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2022. 下)
 - 캠퍼스혁신파크의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3곳, 2022. 9)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곳, 2022. 10), 쇠퇴한 구도심에 도시재생혁신지구(2곳, 2022. 12) 사업 추진
- (혁신도시) 기상청+3개 기관 대전 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입지 원칙 정립(2022. 6),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곳, 2022. 12) 등 클러스터 활성화
- (행복도시) 국회세종 의사당 기본계획 수립(2022. 下) 지원 및 공동캠퍼스 착공(2022. 上), 행복도시권(대전·충청) 발전전략 수립(2022. 5)
- (광역철도)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등 설계 착수(충청권 2022. 上, 울산 2022. 下) 등 관련 절차 조속 추진
 -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 및 후속절차 착수(2022. 下)
- (방사형 순환망 도로) 초광역권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32.5km, 2022. 4) 및 광주(9.7km, 2022. 12) 외곽 고속도로 등 순환망 적기 개통
 - 주변 도시에서 중심을 연결하는 강진~광주(51.1km, 공사) 및 대산~당진 고속도로(25.4km, 설계) 등 방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 (거점공항)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 도출(~2022. 3) 및 기본계획 수립(2022. 下 착수),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2022. 2) 등 지방 거점공항 적기 확충
-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초광역협력 등 지역거점과 결합한 성장거점 발전방안 마련(2022. 下), 광역환승시설 본격 조성(창원중앙역 등 8곳, 2022. 上)
- (강소권 거점)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육상태양광 발전개시, 2022. 1), 제주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의료서비스센터 준공, 2022. 1) 등 특화거점 육성
- (인프라 구축)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새만금신공항(설계착수, 2022. 下), 제천~영월(29km, 설계) 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조속 추진

●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 간 연계 인프라 투자 활성화

- (맞춤형 산단) 지역특화산업 입지 공급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오송·충주·세종·영주·논산 5곳) 조성 추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새만금·전주·대구, 2022. 下)
- (도시재생) 연내 100곳 이상 사업 완료로 생활SOC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주거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20곳, 2022. 11) 선정
- (주거플랫폼) 대상 지역을 도시로 확대(읍·면→시·군)하고 타 부처 연계사업도 추가하여 지역맞춤형 ‘주거+생활SOC+일자리’ 공급(2022. 6)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대구산업선 등 6개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동시 발주 등 총 8개 철도사업 속도감 제고(예산 : 2021년 4,007억원 → 2022년 8,096억원)
- 국도위험구간(7건), 서남해안관광도로(2건) 공사 진행, 세종~청주고속도로 등 3개 사업 설계완료(2022. 10) 등 총 6개 도로사업 차질없이 진행
- (간선철도) 영남권 간선노선(동대구~영천~태화강~일광) 본격 운행(2022. 1), 장항선(신성~주포, 2022. 6), 부산차량기지(2단계, 2022. 12) 착공 등 적기 이행, 공사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등 일반철도(14개) 및 KTX 등 고속철도(4개) 적기 구축, ‘204차 철도망’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 철도(수색~광명, 문경~김천, 호남선고속화, 새만금선, 평택~부발)의 조기 착수
- (간선도로) 간선도로망 구축(10×10+6R2)을 위해 아산~천안(20.6km, 2022. 12) 등 고속도로 개통, ‘5차 국도·국지도계획’ 중 핵심사업 발주(2022. 4)
- (일반공항) ‘6차 공항계획’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권 보장과 영토 수호를 위해 소형공항 건설(2022년, 올림 : 공정률 30% 목표, 흑산 : 설계완료, 백령·서산 : 예타)
- (대도시권 범위) 지역 특성에 맞게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현행 : 대도시권 중심지에서 40km 이내 → 개선 방향 : 통행시간 등 이용자 관점) 설정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정비(광역교통법령, 2022. 上)

●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 (국내도시) 세종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등), 부산 스마트빌리지 리빙랩(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등 시범도시별 혁신서비스 실증·운영(2022. 5), 지역거점 스마트시티(4개) 포함, 35개 도시 대상 스마트화 추진(2022. 4 선정)
- (해외도시)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마련 및 기업기술 실증 지원(2022. 2, 10개)
- (국토) 전 국토를 가상구현하는 디지털 트윈(3D 지도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국토위성 운영 확대(1호 2021. 10~, 2호 2022. 下), 정밀 위치정보 제공 KASS위성 발사(2022. 4), 민간도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설치(2022. 下)
- (교통) 미래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SOC 디지털화(2022. 下)

● 국토·도시·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대상 확대(시행령 개정, 2022. 12), 용적률 완화 확대(최대 15→20%) 등 ZEB 인증 인센티브 강화(2022. 下)
- (기축건물)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 마련(2022. 6),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금 등 지원방식 다각화(~2022. 12)
- (공간구조) 지역별 탄소 배출, 흡수원 등을 담은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 검토(2022. 下), 탄소 중립도시 조성 추진 계획 마련(2022. 6)
-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 조성 완료(2022. 12), 성과확산 방안도 수립(2022. 10)
- (제로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지 단위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성남북정(~2024 완공, 4.4천호,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수원당수(~2026 완공, 5천호, 50% 이상))
- (그린인프라 확충) 공원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준 개선(지침 개정, 2022. 下) 등을 통해 도시 내 공원·녹지 등 신규 확보(총 42km², ~2030)

● 기반시설 관리 및 투자 확대

- (기반시설 관리) 교량, 터널 등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개량 투자방안 검토(예: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지속가능성 제고 등)
 - 교량 등에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비탈면 위험 취약구간을 선제적 발굴(2022. 3) 하여 예방적 보수투자 확대(1,570억원)

■ 기획재정부 : 상반기 조기 집행, 115조 투자 프로젝트, 민간투자 세제혜택 확대

●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점검 관리 철저

-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점검관리 강화 등 상반기 조기 집행(상반기 집행목표 63.0%) 노력 경주
-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 집행목표 상향(지자체 : 60.0%→60.5%, 지방교육 : 63.5%→64.0%), 추경 편성 독려 등 확장적 운용

●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투자 세제혜택 확대

- 투자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기업투자 : 제도 개선,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33.0조원, 민자 : 신규 11.0조원 발굴 및 4.5조원 집행계획, 공공기관 : 2022년 공공기관 투자목표 67조원 집행(상반기 52.6%) 추진)에 대한 적극 착공·

집행 집중 지원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D·시설투자 세제 혜택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 혜택 신설

●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에 33.1조원 투자

-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 33.1조원으로 확정(2021년 본예산 대비 12.1조원 증가)
- 뉴딜 2.0 신규과제(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기반 조성)를 신속히 안착시키고,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위해 확대 개편된 휴먼 뉴딜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

- 지역균형 뉴딜 국비 투자 확대, 지역 대표사업 체감도 확산,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 등으로 성과확산 추진(국비 규모 : 2021년 10.8조원 → 2022년 13.1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21. 7월 기준 총 23개 24.6조원) 중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4개 공정을 신규로 착공, 여타 사업도 사전절차 조속히 마무리
- 153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2022년 예산 771억원) 차질없이 추진

● 국유재산 개발효과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 주도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 과정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접목되도록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 민간이 개발 가능한 재산범위 확대, 대부기간 확대(30년→50년), 민간합작개발을 위한 공공출자 확대(자본금 30% 내 현금출자→50% 내 현물출자까지 허용) 등
- 등기부(대법원), 부동산공부(국토부) 등 주요장부와 국유재산대장 간 자동연계 및 GIS 기능을 갖춘 ‘차세대 국유재산시스템’ 운영(2022. 1)
- 불요불급한 특례 정비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021. 12)에 따라 특례 존치평가 모형 개발 등 ‘타당성 평가제’ 및 ‘일몰제’ 도입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투자 확대,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 범정부 재난 안전 투자 확대

- 재난안전 R&D투자 등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2021년 20.6조원→2022년 21.9조원), 제4차(2023~2027) 범부처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2022년~2024년 73억원), 기관 간 재난안전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예측 지원

● 분야별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 재해위험 개선지구·저수지,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확대(2021년 804개소→2022년 916개소)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내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속 확대(2021년 27개소→2022년 29개소)
-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설비 지속보강(2021년 70.2%→2026년 80.8%),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 보강공사비 지원(2022~2024년, 96개소)

●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상반기 목표 : 60% 이상) 추진,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만기 5년→최대 30년, 공공재개발·재건축 발행 한도 200%→400%)

■ 정부 SOC 투자 관련 주요 부처 경기회복, 국가균형발전, 안전에 투자 초점

● 정부 SOC 투자 관련 주요 부처들 국가균형발전 및 안전에 투자 초점이 맞추어진 가운데 상반기 재정투자 집중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함.

- 국토교통부 초광역권 조성 및 연결 인프라, 지역중심도시, 탄소중립기반, 노후시설물 관리에 투자 초점이 맞추어짐.
-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집행 집중을 통한 경기회복 도모와 국가균형발전 투자와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과 더불어 재난안전 투자에 집중함.

● 건설기업들, 상반기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또는 안전시설물사업)에서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전략 수립 도모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주택’... 수요보다 공급,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 수요억제 → 공급확대 변화 긍정적, 수요자 자금조달 억제 여전해 개선 필요 -

■ (2021년 성과 및 반성)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을 통해 공급기반 마련, 투기수요 관리 등 효과를 거두었던 반면 시장에서의 가격 불안은 여전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급 관리에 노력한 결과 향후 주택공급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자체 평가
 - (공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 규모 지구지정, 3080+ 대책 발표 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 약 16만호 발굴 등 공급 초기 단계 수행
 - (수요) 세제 개편 및 금융·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기반 마련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감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 개편
- 그 외에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거복지 를 향상하고, 부동산 조사체계 강화·공공부문 투기근절 등 시장 공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
-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유지된 것은 초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지역별·시기별 수급 미스매치 등을 원인으로 지목

■ (2022년 정책목표 및 수단) 공급 체감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 (공급) 예정된 주택공급의 속도 제고 및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요인을 최소화해 속도 제고
 - 2022년 예정된 분양물량 39만호 및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 46만호 공급(10년 쯤 대비 30%↑)
 - 2017년 이후 이미 발표된 전국 205만호 수준의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택의 공급 에 기인한 주택시장안정 모색
 - 청년 및 신혼부부 청약(특공) 물량은 전년(5.9만호) 대비 2.3배 증가한 13.4만호 수준까지 확보
 - 공공성 있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적용하고 절차를 개선하며, 그간 민간 정비사업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① 분양보증 시 분양가 통제, ② 뚜렷한 이유 없는 주무 관청의 인·허가 중단, ③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 및 관행적인 요소 타파
 -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면적 확대 및 공간 분리 허용,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안주거 상품의 단기 공급 확대 유도

<표 1> 주택 부문 주요 정부부처 2022년 업무계획 요약 및 평가

구분	성과 및 반성(2021)	정책목표(2022)	정책수단(2022)	평가
공급, 청약	36만호 지구지정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및 국민 체감을 통한 시장 안정	46만호 분양 (분양 39+사전청약 7) 205만호 공급계획 이행	사전청약 제외하면 '21과 유사한 수준, 공급속도 제고해야 사전청약 관련 성과 가시화 필요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16만호) 발굴		특별공급물량 13.4만호 확보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실수요자 고려한 청약제도 개편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및 분양가 통제, 인허가 중단, 기부채납 요구 등 정비사업 지연 관행 타파, 지역주택사업 선진화	기존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 및 관행 타파는 긍정적
			대안주거 상품 공급 확대 유도	공급 적시성 고려하면 대안주거 공급이 2022 주요 이슈
				금융규제 강화에 기대 안정화보다 금융규제 정상화 필요
금융, 세제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안정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적극적 부채관리	기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행	구체적인 실수요자 보호장치 기대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	서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거래, 임대	부동산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	투기 및 시장교란행위 집중 조사 및 특정지역 모니터링	의지 표명은 긍정적이나 실수요자 보호에 주안 뒀다
	공공부문 투기 근절		LH 혁신 완수	-
	임차인 보호 조치 및 임대차 신고 도입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임대차 신고제 확대 개편 임대차 관련 교육, 분쟁조정위 상담서비스	임차인 보호조치 확대 이전에 국내 임대차 시장 속성 분석 필요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 시행 자체에 대해 재고해야

자료 :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21.12.27),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1.12.22), 기획재정부 업무계획(2021.12.22).

- (금융)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적극적 부채관리와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 공존
 -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LTV 적용을 30% 내지 50% 선으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지난해 이미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 4) 및 관리 강화방안(2021. 10)에서 발표되었던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및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기 확대
 - 서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 (거래)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및 공정 시장 조성,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서울·수도권의 편법 증여, 지방·중소도시의 투기 및 교란행위 등 집중 조사
 - 거래가격 및 신고가 등 지표 활용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불법 청약 근절을 위한 청약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전매행위 기획조사 시행
 - 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및 감면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등 공공성 강화

■ (평가) 2022년 계획은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책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수요자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수요 억제책이 잔존해 개선 필요

- 주택공급은 기존 사전청약 물량의 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며 공급 적시성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는 대안 주거의 공급 확대일 것임.
 - 2022년 분양 물량 39만호로 예상했지만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오히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부동산 114, 2021)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
 - 공급의 적시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도심형 대안주거의 공급 확대 유도책이 2022년 주택공급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공급 물량에서 강조한 205만호 수준의 ‘압도적’ 공급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시화해야
 - 한 해 청약 물량의 1/3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듯
-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관행 개선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보호 강화 조치는 환영할 만함.
 -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각종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 높여
 - 영세 조합원 피해가 발생했던 지주택 사업에 대한 개선안도 현장에 목소리를 경청해 도입해야
-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는 확대해야겠지만 임차인 보호 조치는 실익이 크지 않아 시장 분석 선행 및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임대차 신고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임대차 시장의 속성 및 흐름을 파악키 위해 확대 필요
 - 임차인 보호 조치에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임대료 상승에 영향 줘 철저한 시장 분석 선행 필요
-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보다 금융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 보호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함.
 - 금융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여력 약화를 가져오므로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에 대한 규제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 규제 완화와 함께 ‘서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의 구체안 조속히 도출 필요
- 공정 시장 구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나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수요자 보호에 주안을 줘야 함.
 - 청약 신청자 보호시스템 강화는 신청자 보호 및 무순위 청약도 저지할 수 있어 긍정적 평가 가능
 - 다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시장 기능을 파훼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건설기업은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없는가?

언젠가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도시, 스마트 홈 등이 건설산업의 주류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수많은 스마트 무엇에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등 이슈가 되는 기술 분야들을 어떻게(how) 건설에 접목할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진행형인가라고 물어보면 필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신기술이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산업혁명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더 궁금해야 할 사안은 그 혁명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그 원동력이었고,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4차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곤 한다. 그런데 각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다. 1차 산업혁명은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봉건영주세력이 자본가세력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주역의 변화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경제시스템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마도 이것을 두고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2차와 3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자료를 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가? 보통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 시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역이 미래에 뭔가 달라지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건설산업은 너무나도 보수적이라 더욱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다. 그 증거가 바로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이다. 우버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기존 택시사업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카카오드라이브가 등장했을 때도 기존 대리기사 사업자들이 반대했다. AI와 IoT, 빅데이터로 무장한 이들 신세력들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무기로 기존 시장을 잠식해버렸고, 그 영역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시장의 주도세력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자가 그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아마존이 그렇고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등이 그들이다.

건설산업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을까? 필자는 몇 년 전에 스마트 홈을 플랫폼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스마트 홈은 당연히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주택이겠지만, 이 주택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그리고 건설 분야 여러 주체의 협력체계로서 플랫폼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스마트를 새로운 첨단기술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스마트라는 용어의 기원이 아이폰에서 출발한 것이고, 아이폰의 성공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스마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에서 스마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다도 건설상품들에 내재된 플랫폼 비즈니스의 뿌리를 찾아내고 다른 분야의 주체들이 들어와서 선점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설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산업혁명 때의 봉건영주와 같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아주경제, 2022.1.12>